

코로나 여파 “주택시장, 금융위기처럼 U자형 침체 가능성”

주산연 긴급 설문조사...50.8% “급락 후 회복”

“주택시장 규제 시장경제 기본 원리 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주택시장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U자형’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주택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50.8%가 “향후 1~2년간 급락 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의 18.8%를 “3~5년 이상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30.6%는 “연말까지 단기 급락 후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혀 침체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 1년간(1997년 10월~1998년 11월) 15.2% 하락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8.2% 급락했다. 떨어진 전국 아파트값은 2년 8개월이 지나야 회복했다. 서울은 2년 3개월이 걸렸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서울은 5년간(2008년 9월~2013년 9월) 9.1% 하락했다. 이전 고점 회복까

지 3년 1개월이 걸렸다. 서울과 달리 전국 기준으로는 하락 기간은 6개월, 낙폭도 2.7%에 그쳤다. 고점 역시 2009년 12월 9개월만에 회복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당시 등락 폭이 큰 수도권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등락폭을 보여 1~2년 사이에 20~30%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 영향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중 어떤 양상을 보일지 아직은 불투명하다면서도 과거 패턴과 경기 예측 전망에 따르면 두 번의 경제위기 이후의 영향에 비해 작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는 실물시장에서부터 위기가 점진적으로 확산돼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으로 위기 전개와 확산이 느리

지만, 그 기간과 폭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연응답자의 49.3%가 현재 주택시장 규제는 전반적으로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규제 완화 우선 순위에 대해 대출 규제, 거래 규제, 가격 규제 순으로 나타났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 주택시장 대책은 과거 더듬기식 활성화 대책보다 모든 대안을 망라할 필요가 있다”면서 “두 차례 정도로 나눠 1단계는 5월 중 우선 시행하고 이후 추세를 보아가며 6개월 뒤인 11월 쯤 2단계 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유튜브로 중계한다.

조인호 기자

‘코로나19발 위기’ 다음 우선지원 업종 “자동차·해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항공업 지원을 결정한 정부의 다음번 지원 업종에 이목이 집중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해 SOS를 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업종으로는 자동차, 해운 분야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에 대해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자금’ 4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을 설치하기 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요구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하기로 했고 지난 2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1조2000억원, 1조7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에 앞서 항공사에 대한 선(先)지원을 결정한 것은 항공업의 위기가 여타 업종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항공사들이 정부의 대책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부도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정부가 자금 조성에 앞서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이다.

항공업 위기를 잠재운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을 통해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금 운영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자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국회에서의 산업은행법 개정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지원 대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권과 업계에선 자동차, 해운 등이 우선적인 지원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항공업계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가 되는 곳이 자동차, 해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다음 지원 타깃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기금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라는 뜻인데 자동차와 해운 업종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동차 업계에선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업체들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성차 판매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유럽과 북미지역에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판매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해외공장들 역시 가동 중단의 위기를 맞았다. 이에 자동차 업계 대표들은 최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신규 유동성 지원 등을 요청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투자 철회로 쌍용자동차는 생존 위기 상황에 처했다.

해운업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하늘길 뿐 아니라 바닷길도 막힌 까닭이다. 일단 정부는 해운산업 지원을 위한 1조2500억원의 추가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추가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들이 기금 지원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조달을 할 것인지는 그들의 선택이기에 (지원) 순서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일단은 기업들이 어렵다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봉우 기자

으뜸효율 가전 구매 197억원 환급

총 사업재원 13% 소진

올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사업이 시작된 후 200억원에 가까운 환급금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부터 이달 22일 까지 한 달간 으뜸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환급신청 건수는 17만6258건, 신청금액은 197억원이다. 환급 신청 때 제출된 구매영수증 기준 해당제품 구매총액은 2030억원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에어컨,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TV, 세탁기, 전동청소기 등 10개 품목이다.

이번 환급사업 기간 국내 가전 제조업체(7개사)를 대상으로 매출액을 조사했더니 전년 동기 대비 환급대상 가전 매출액은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전기밥솥(23.5%), 세탁기(23.3%), 냉장고(13.9%), 김치냉장고(12.9%), TV(11.6%) 등이, 신청금액 기준으로는 세탁기(26.1%), 냉장고(23.3%), 김치냉장고(20.2%) 등이 주를 이뤘다.

이번 사업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은 “환급사업 기간 중 보급된 고효율 가전제품은 연간 약 6900MWh, 4인 가족 기준 약 185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급사업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총 1500억원의 재원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재원 조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사증 입국 차단하니 외국인 발길 뜰

단기체류 외국인 266명에서 105명으로 감소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자가 4월 초 일일 1332명에서 지난 2주간 일일 779명 감소했다. 특히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난 13일부터 무사증 입국을 차단한 효과로 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13일부터 23일 사이 입국자는 4월 1일부터 10일 사이 입국자보다 감소했다. 우리 국민 입국의 경우 일평균 2664명으로 4월 1일부터 10일 사이 3611명 대비 약 27% 감소했다.

외국인 입국자는 4월 13일부터 23일 사이 일평균 779명으로 4월 1일부터 12일 사이 1332명 대비 45% 감소했다. 특히 단기체류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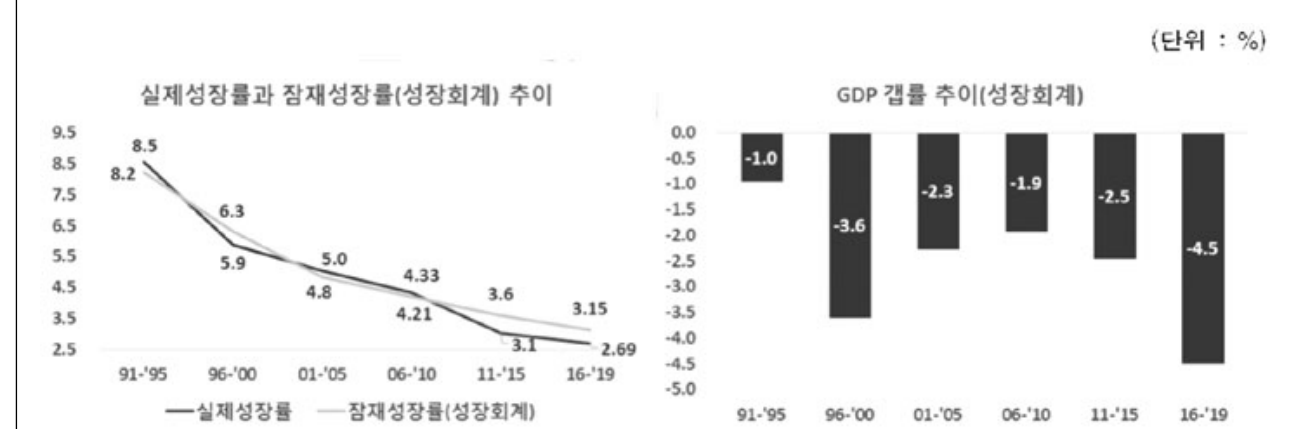
국인 입국자는 일평균 266명에서 105명으로 61% 줄었다.

4월 13일부터 23일 사이 일평균 입국자 3443명 중 우리 국민은 77% 이상이다. 외국인 입국자 779명 중에서도 장기체류자는 674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대부분 결혼, 유학, 일자리 등 우리나라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월 13일부터 실시한 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 효과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감소에서 크게 나타났다”며 “정부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대해 검역을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경제성장률 7위→15위 추락...“해결책은 규제개혁”



최근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 성장회계 모형을 이용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6~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11~2015년과 2016~2019년 두 기간 연속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았다.

이는 최근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특히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인 ‘GDP 겹돌’은 2016~2019년 -4.5%로, 외

환위기를 겪었던 1996~2000년의 -3.6%보다도 컸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파른 성장률 위축세는 국제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해 2019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경제성장률 7위에서 15위, 잠재성장률 3위에서 19위로 하락했다. GDP 겹돌은 1위에서 30위로 29계단이나 추락했다.

이 같은 가파른 위축세는 아일랜드의 사례와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추락한 기간 동안 아일랜드는 OECD 34개국 중 경제성장률 30위에서 1위로, 잠재성장률 19위에서 1위로, GDP 겹돌은 31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인하와 노사안정을 위한 사회연대협약 체결 등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하

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평가다.

한경연은 최근의 우리나라 성장위축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 하락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평균 9.5%로 정점을 찍은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평균 3.0%까지 하락했다.

한경연이 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2000년대 41.8%에서 2010년대 24.8%로 하락했다. 이는 성장위축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40% 내외 수준이었다가 2010년대에는 25%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선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성장률 결정요인들 중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성장을 유지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투입을 늘리는 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투입을 증가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자본이 누적적으로 축적될수록 한계 자본생산성이 낮아지는 데다 법인세율 인상과 세제상 유인약화 등으로 자본투입 유인도 약해졌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해선 기업 관련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규제개혁은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 및 투자비용 감소를 통해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다.

주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경제체질 악화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 속에 올 해는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및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8	2,834,856,141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7	66,312,413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161	1,749,102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8,610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858,567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